靑 문정인 발언 불끄기…한미정상회담 영향 최소화

“문 특보에 도움 안 된다” 전달… 여당도 방어벽

野 “한미동맹 미칠 악영향 우려 … 사퇴해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 등에 대한 한미 정부 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최근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되는 등 북미관계도 삐걱대는 등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방미 발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 및 문답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앨리시아 에드워즈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17일(현지 시각) “우리는 이런 시각이 문 특보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뒤 더 이상의 언급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당장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문 특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쯤 되면 문 특보는 외교·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상전 노릇이나 멘토 말고 사퇴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개인 발언으로 치부하지 말고 강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충격 발언”,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뒤 “좌충우돌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의중을 공개해 한미 이견을 노출시켰다. 외교 협상의 ABC도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원 전 대표는 “발언을 한 것은 시기와 장소 등에 있어서 부적절했지만 그 내용은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긴급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에게 오늘 책임질만한 분이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며 “그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여당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아무도 안 하는 말을 용기있게 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외교 파장이 있는 듯한 호들갑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문 교수님(문 특보)의 발언은 북한용”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담론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던진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언술이 때로는 중국을 향해서, 때로는 북한을 향해서, 때로는 일본과 미국을 향해서 나오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뜨자 일자리 42개 생겨

목포 대양산단 위지트에너지서 채용… 전남도 내일 율촌산단서 개최

지난달 30일 목포 대양산단 (주)위지트에너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에서 42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청년구직자들을 버스에 태우고 구인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전남도의 정책이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에 본사를 둔 (주)위지트에너지는 스마트 전력량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 1일 목포 대양산단에 공장을 신설·준공했다.

전남도는 공장 가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남일자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목포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발굴해 청년희망버스를 운영하는 등 구인·구직 매칭에 심혈을 기울였다.

(주)위지트에너지 관계자는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공장이 일정대로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효석 전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구직자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구인 기업에 맞춤형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는 물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잡매칭데이 등 일자리 매칭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기업과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21일에 순천 율촌산단 (주)엘티아이 등 4개사에 청년희망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7월 11일 나주 한전본사에서 에너지밸리 잡매칭데이를 개최할 계획이다.

청년희망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잡매칭데이 참여를 바라는 구직자는 전남일자리종합센터(http : //job.jeonnam.go.kr/?061-287-1142) 일정에 따라 참여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홍석현 통일외교 특보직 고사

靑, 해촉 절차 진행 중

청와대는 19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직을 고사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힘에 따라 해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홍 특보를 위촉한 직후 중앙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사의 표명하는 등 몇 차례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다른 특보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때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해촉할 생각이었는데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먼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전 회장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홍 특보의 개인적인 사유여서 저희가 굳이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다”고만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가람 청년문화제 개막 제3회 빛가람 청년문화제가 19일 오전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1층 한빛홀에서 열렸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 조환익 한전사장 등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들이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농특산물 산지체험행사 학교 납품으로 결실

서울지역 19억 납품

전남도가 수도권 소비자를 중심으로 지역 농특산물 산지 체험행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서울지역 학교급식에 19억원을 납품하는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관계자를 시작으로 서울시 아파트연합회 2회, 경기 고양시 주민자치회, 한살림서울생협조합 등 올 상반기 6차례에 걸쳐 수도권 소비자 단체를 초청해 안전하고 우수한 전남 농특산물 산지 체험행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서울시 학교급식 등 납품 19억원을 납품한 것을 비롯해 현장판매 1100만원,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단지에 절임배추 2000박스 예약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 서울 아파트단지 등에서 직거래장터를 3차례 개최키로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10여회의 산지 체험행사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소비자단체 초청 산지 체험행사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전남의 우수 농수산물의 학교급식 납품 및 판촉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장, 농산물 유통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수도권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춘봉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산지 체험행사를 통해 전남친환경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 등 수도권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에 적극 나서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도권 소비처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택시줄이기 사업 사실상 포기

시행 3년째 실적없어 국비 반납

보상비 너무 적어 현실과 괴리

광주시가 택시 줄이기(택시 감차)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사업 시행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단 한 대의 실적도 내지 못한 데다 국비 반납 등으로 사업 추진의 의지도 꺾였다. 감차에 따른 보상비 지원이 너무 적어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큰 것이 가장 큰 이유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4년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듬해부터 감차(減車) 보상을 시행했지만 실적이 전무하다.

2014년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광주의 공급 과잉대수는 면허 대수의 15.5%인 1268대에 달한다.

감차에 따른 재원은 택시업계의 출연금에 국비와 시비 등을 더해 마련하지만 대당 1억원이 훌쩍 넘은 보상비 중 예산 지원은 1300만원에 불과하다.

업계와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감차위원회에서 출연금 마련을 위해 개인택시 월 5만2000원, 법인택시 월 1만7400원을로 내기로 했으나 이 역시 한 푼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개인택시는 1억3500만원, 법인택시는 5000만원선이다.

감차를 위해서는 지원 예산 1300만원을 뺀 대당 1억원이 웃도는 돈을 출연금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광주시는 2015년 국비 3900만원 반납을 시작으로 지난해 2억8900만원, 올해 2억5000만원을 반납한다. 내년 감차 사업에 따른 국비 신청도 아예 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이 감차 사업 자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3년 만에 사업을 접은 셈이다. 정부의 무리한 탁상행정으로 시중 개인택시 매매 가격만 올려놨다는 혹평도 적지 않다.

광주 택시 수는 법인은 76개 업체에 3407대, 개인은 4797대 등 모두 8204대다.

/연합뉴스

광주시 교통약자 이용 편의 무장애 버스정류장 시범 설치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 향상과 이동권 확대를 위해 무장애(Barrier Free) 버스정류장이 시범 설치된다.

광주시는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주요 버스정류장에 굴곡보도와 가로화단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휠체어 대기장소와 버스정차 위치 표시, 점자블럭 설치 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억7500만원을 투입해 25곳에 설치하고,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105곳에 만들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 무장애 정류장 설치를 위해 장애인 단체와 지난 5월부터 대상지 선정과 정비 내용 등을 협의했다.

광주시에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은 2250여 곳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체 정류장 규모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모델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